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현장 경영애로 완화… 환영” vs “대안 없이 유예만 이어가”

〈소상공인·프랜차이즈〉

〈환경단체〉

계도기간 종료 2주 앞두고 철회·유예 인센티브 제공 등 자발적 참여 유도 업계 반응 엇갈려… 혼선 우려도

정부가 식당과 카페 등에 적용되는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해 편의점·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력과 비용 부담을 호소해온 소상공인들은 일회용품 규제 완화 해소가 반갑다는 반응이지만, 이미 매장에서 모든 종류의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했던 커피 프랜차이즈는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품 사용의 계도 종료 시점을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12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된 뒤 지난해 11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과태료 부과 → 자발적 참여로 전환

- 비닐봉투**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 주력
-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 계도 종료시점 추후 결정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 개선, 가격 안정 유도
- 종이컵**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등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제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지난 7일 세종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소상공인을 고려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가락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계도기간 종료를 불과 2주 앞두고 일부 규제를 철회 및 유예한 것이다. 환경부는 편의점 등에 적용되는 비닐봉투 규제도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신 장바구니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종이컵 사용 금지에 따라 재사용컵을 세척해야 하는 등 시간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온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연착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면 그 대안으로 종이봉투와 함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마다 매입 방식이 다른 만큼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인력난·비용부담·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 경영 애로와 혼란이 예상된다”며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이 반갑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많은 카페가 정부의 친환경 제품 사용 확대 기조에 맞춰 조치를 취해왔는데, 그동안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현장에서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영업점 등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컵 모두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해왔다. 일부 기업들은 일회용컵 수거기 또는 재사용컵 세척기를 설치했다.

한 예로,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종이컵, 플라스틱컵 모두 매장에서 쓰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는 개인컵 사용자에게 음료 할인 혜택을 300원에서 400원으로 확대, 현재까지 개인컵 할인 건수가 1억 3000만 건(누적 550억원)에 달한다.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35)씨는 “종이빨대로 대량 주문했고 다회용컵도 늘렸는데, 정책이 바뀌니까 혼란스럽다”며 “솔직히 그동안 소비자들의 종이빨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무시하다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번복하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를 권장하고 이를 사용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시기는 미정이다.

환경단체 측은 “번복되는 일회용품 규제를 두고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1년 간 유예를 했는데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유예만 이어가는 건 정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국내 가구 10곳 중 8곳 “소득, 일년 전 수준”

통계청 ‘2023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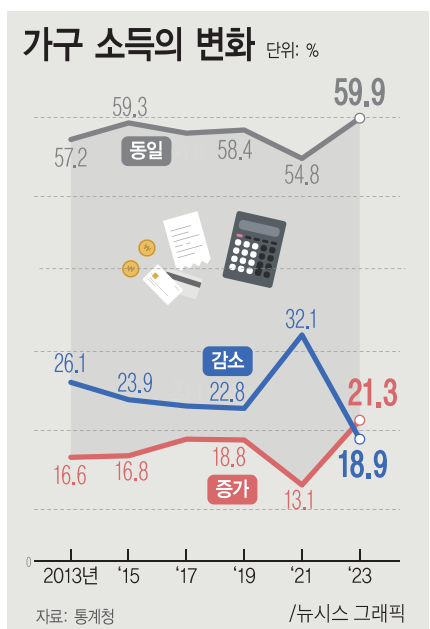
가구 부채수준, 같거나 더 불어나 가구주 26% “내년 재정 좋아질 것”

국내 가구 10곳 중 8곳 가까이는 1년 전과 비교해 가구소득이 줄거나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구 10곳 중 9곳은 부채 수준이 1년 전과 같거나 더 불어났다. 이는 설문 형식의 통계다.

통계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복지와 사회참여, 여가, 소득·소비, 노동 등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조사해 매년 5개 부문을 발표한다.

만19세이상 가구주 가운데 18.9%는 1년 전보다 가구소득이 감소, 59.9%는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78.8%에 달하는 가구 소득이 늘지 않은 것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3%였다.

1년 전보다 가구부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20.9%, 동일하다는 응답은 67.1%였다. 88.0%가 전년 대비 빚을 줄



이지 못했다. 12.0%만 부채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가구주의 25.7%는 내년에 가구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금전상황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는

응답은 13.7%로 2년 전 응답 대비 1.8% 포인트(p) 늘었다.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대가 17.1%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10.7%로 가장 낮았다.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한다는 가구주 비율은 21.2%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다. 만약 재정이 악화되면 우선 줄일 지출로 66.1%가 외식비를 꼽았다. 이어 식료품비(41.7%), 의류비(40.2%), 문화·여가비(36.1%) 순이었다.

여가활동으로, 주중(85.9%)과 주말(76.2%) 모두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휴식과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이 그 뒤를 이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 취미·자기개발 등이었다.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경제적 부담(50.2%), 시간 부족(23.1%) 등을 꼽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 두 번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18건 프로젝트, 46兆 맞춤형 지원”

〈경제부총리〉

비상경제장관·수출투자대책회의 경기 하남 최첨단 공연장 사업 등 지목

정부가 8일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프로젝트 18건의 규제 애로 및 행정절차 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기 하남에 설립이 예정된 최첨단 공연장 등의 사업을 지목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 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 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 요구에 맞춰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도 언급했다.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민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4만 원대인 5G 최저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할 것”이라며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상정 움직임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정·처리 철회를 요청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KDN, 국내 상장… 지분 20% 매각

>> 1면 ‘벼랑 끝 위기 한전…’서 계속

위로금 재원 확보 범위 내에서 희망 퇴직을 시행하고, 재원은 2직급 이상 임직원의 2024년 임금인상 반납액 등으로 활용한다. 한전의 희망퇴직 시행은 창사 이후 두 번째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행, 원전수출 추진 등을 위해 약 800명의 대규모 인력 수요가 예상된다

나, 인력증원 없이 본사 및 사업소 조직 효율화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 등 자산 매각에도 나선다. 인재개발원 매각은 대체 교육시설 확보와 부지 용도 변경 등 가치를 높인 후 매각이 추진된다.

전력산업 ICT(정보통신기술)분야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전KDN은 매각 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증시 상장

통해 보유지분 100% 중 20% 매각을 추진한다. 또 고정배당금이 확보돼 수익성이 양호하고 매각 제한조건이 적어 투자자 관심이 높은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사업 보유지분 38% 전략 매각한다.

한전은 주택자금 한도축소, 사내대출 금리인상, 해외화자금 영어권 국가 지원 제외 등 기존 혁신계획을 이행하고, 올해 간부직 임금인상분 반납과 관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12월 임금인상분이 확정되는 대로 반납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